# Ⅰ.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

## 1.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.

o 통일문제는 주인공인 우리 겨레의 뜻과 의사에 따라,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민족적 과제입니다.

- 특히 남북한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,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.

o 이미 7.4 공동성명에서 통일 3원칙의 하나로 합의한 것이며,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재확인한 사항입니다.

o 다만, 한반도문제의 성격상, 우리 자신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 따라서 여기에서의 자주는 외세를 배격하는 「배타적 자주」가 아니라,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「열린 자주」입니다.

-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분명히 강조하였으며,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

**2.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,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.**

o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.

- 즉, 남북관계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, 점진적·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야 하며

-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남북연합을 이루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, 완전한 통일국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

o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하면서, 「낮은 단계의 연방제」를 제시하였습니다.

- 이는 과거 북한이 당장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이루자고 하던 주장이 변화된 것으로서, 우리의 남북연합에 접근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o 북한은 「낮은 단계의 연방제」가 "당장 통일은 어렵다", "과도기간이 필요하다", "현재 남북이 있는 그대로 2체제 2정부를 유지한다"고 밝히고 있어 우리의 연합제안과 공통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북한의 「낮은 단계의 연방」에서는 중앙정부를 두지만, 이는 독자적 권한(외교권, 군사권)이 없는 상징적 기구로서, 우리의 남북연합에서 상정하고 있는 「정상회의」·「각료회의」 등 남북간 상설적 협의체와 유사하다고 풀이됩니다.

**3. 올해 8.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,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, 비전향장기수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.**

o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, 김정일 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하였습니다.

- 생사 및 주소 확인, 면회소 설치,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하자고 제의하고, 우선 이번 8.15를 기해 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.

-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공감함으로써 제3항이 합의된 것입니다.

o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「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·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」가 타결되었습니다.

- 이 합의에 따라 우선 오는 8.15~18까지 남북에서 각기 100명의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여 가족과 친척을 상봉할 예정입니다.

- 아울러 상봉면회소의 설치·운영은 이산가족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o 또한 이번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,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**4.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, 사회, 문화, 체육, 보건,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.**

o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남북간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,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견인차입니다.

- 특히 남북 경제협력은 상호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,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
- 정부가 그동안 남북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, 그리고 협력을 도모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

o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 경제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남북간 철도연결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.

- 이 과정에서 쌍방 정상은 경의선 철도 연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남북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, 남북이 모두 원하는 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간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보장·이중과세 방지·청산결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,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공감하였습니다.

o 또한 남북간에는 이미 체육·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서울·평양 왕래행사 등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-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교류의 범위가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,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.

**5.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.**
**김대중대통령의 초청에 따라,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.**

o 이번 남북공동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분단이후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처음으로 직접 서명한 문건으로서, 특히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.

- 김정일 위원장도 자신이 서명한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.

o 이에 따라 남북은 오는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- 장관급 회담이 정례화되고 분야별 후속회담이 개최되면,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문제 뿐 아니라 남북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도 협의·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.

o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는 북한의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확인함은 물론, 남북정상회담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- 구체적인 답방시기는 앞으로 당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.

## Ⅱ. 주요 관심사항 질의 · 응답

### 〈 남북정상회담 관련 〉

**1.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관련, 우리측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면합의는 없는가?**

o 아무런 이면합의도 없습니다.

- 우리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바도 없고, 할 이유도 없습니다.

o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 국제정세, 북한의 내부사정, 남북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
- 우선 탈냉전 등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북한도 생존을 위해서는 대외관계의 개선 등 변화가 불가피하고, 우리와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며

-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와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o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고, 그 결과 북한이 우리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.

## 2.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?

o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쌍방 정상간에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-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총 11시간 동안 직접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며, 그 결과 서로의 입장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그 결과 남북간에는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, 쌍방 통일방안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- 이는 앞으로 평화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고, 통일의 큰 길을 열어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.

o 또 다른 큰 성과로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쌍방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는 것입니다.

- 특히 합의의 재생산보다는 합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.

o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합의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입니다.

- 이는 사실 합의가 용이치 않았던 문제 중의 하나였으나, 남북정상회담이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며 계속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으로,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.

**3.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,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나?**

o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,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.

-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긴장을 완화해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- 김정일 위원장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.

o 같은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

-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미·북 제네바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- 또한 이것이 북한의 미·일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.

o 앞으로 개최될 남북 당국간 대화에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 등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협의,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.

**4.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영접 나올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나? 몰랐다면 허술하게 대비한 것은 아닌가?**

o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대비는 했지만, 미리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.

o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움직임과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호 등의 이유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- 이번 정상회담 준비과정, 특히 의전절차 등 협의과정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의 움직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사전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.

o 정부는 사전에 남북간에 합의한 체류일정안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였으며

- 특히 대통령의 서울 출발시부터 사전에 준비한 비상사태 대비계획에 따라 유무선 비상통신망의 점검 등 만일의 가능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*5.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주도했고, 우리가 여기에 끌려 다녔다는 주장이 있는데...**

o 이번 정상회담의 장소가 평양이기 때문에 외견상 북한 주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.

- 그러나 역으로 누가 상대편 지역으로 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

o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이제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추구해 왔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최되었을 뿐 아니라

- 남북공동선언의 내용도 그 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사항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.

o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도 이미지 개선 등 도움을 받았겠지만,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, 우리가 목표하던 성과들을 이룬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

## 〈 공동선언 내용 관련 〉

**1. 북한이 공동선언 제1항의 「자주」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나 국제공조 폐기 등을 주장할 가능성은 없나?**

o 공동선언 제1항과 주한미군 및 국제공조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.

o 주한미군문제는 기본적으로 한·미간에 협의·결정할 문제로서

- 현재 우리와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따라서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.

-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으며, 그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.

o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공조는 북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,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 이기는(win-win)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.

- 즉, 우리 민족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협조토록 하자는 것입니다.

-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, 우리가 중·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도 미·일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.

## 2. 공동선언 제2항은 누가 누구의 방안을 수용한 것인가? 그리고 우리의 통일방안은 어떤 것인가?

o 이번 남북 공동선언 제②항은 남북간에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, 앞으로 통일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.

- 그리고 그 접점은 당장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으며,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단계적·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- 이런 점에서 과거 당장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이루자고 하던 북한의 주장이 변화되었으며, 우리의 남북연합에 접근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

o 정부는 1980년대 말 국회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하에 마련된 「민족공동체 통일방안」을 계승하고 있습니다.

-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이 일찍이 제기하였던 「3단계 통일방안」도 우선 남북연합을 형성한 다음, 단계적으로 완전한 통일국가(연방정부→단일정부)를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 「민족공동체 통일방안」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## 3. 북한의 비전향장기수는 송환하는데, 우리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

o 국군포로문제와 납북자문제는 인도적 견지에서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,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

- 다만 직접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범주에 넣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겠습니다.

o 지난 6월말 개최된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송환,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에 합의하면서

- 우리측은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이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, 같은 맥락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.

o 이번 합의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고, 또 앞으로 상봉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.

-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범주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

## 4. 남북경제협력은 결국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지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? 그러면 상호주의는 포기한 것인가?

o 남북간 경제협력은 우리의 능력 범위안에서, 그리고 남북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.

- 우리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거나, 혹은 남북 중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,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.

o 북한의 경제현대화를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,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해결할 일입니다.

- 정부로서는 외국정부나 기업, 또는 국제기구의 협력기금이 유입된다면 북한의 경제현대화에는 물론, 우리기업들의 대북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, 이를 적극 지원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.

o 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조건없이, 민간차원의 경협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, 당국간 협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

- 다만, 남북간 국력의 격차,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.

## 〈 정상회담후 주요 현안관련 〉

**1.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신드롬 등 북한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,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?**

o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.

- 하나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「적」이라는 것이고, 하나는 함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구현해 나가야 하는 「동반자」라는 것입니다.

o 그 동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때로는 「적」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고, 때로는 「동반자」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.

-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, 그 동안 냉전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내 일부 대북관이 한쪽으로 경도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

-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.

o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이중적인 면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, 따라서 북한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 다만,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, 고정시켜 놓고 보기보다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## 2. 북한은 변화했는지? 변했다면 무엇이 변했는지?

o 아직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, 탈냉전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.

-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,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

- 우선 '자주'와 관련하여 과거와 같은 배타적 자세를 고집하지 않았으며,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.

- 또한 과거 고려연방제를 고수하지 않고, 평화공존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남북연합에 접근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.

o 정상회담 이후, 이산가족문제 해결문제를 이행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먼저 제의하고, 전향적인 합의서안을 제시하는 등 정상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
- 또한 대남 비방중상이 전면 중단되었는데, 이는 과거 7.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한 바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

o 그러나 아직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거나,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, 따라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우리의 안보태세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.

- 또한 더욱 바람직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

**3. 북측의 우리측 특정언론 취재거부나 야당총재 비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,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?**

o 기본적으로 특정 언론사의 보도경향 또는 논조를 문제 삼아 취재에 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
- 특히 이른바 「언론 길들이기」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, 현실적으로 우리 언론의 수준과 특성을 볼 때 그 같은 일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.

o 또한 야당 총재 등 우리측 특정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.

-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고, 확대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.

o 정부는 앞으로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면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하고, 그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o 아울러 북한이 우리 체제의 특성 및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간에 신뢰를 갖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입니다.

- 이런 점에서 8월중으로 예정된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## 4.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나 캐릭터를 사용하거나, 북한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?

o 우리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,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나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초상권이나 최고당국자에 대한 예우 등을 지켜야 합니다.

- 특히 남북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, 우리사회의 통념을 존중해야 하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.

o 먼저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 또는 캐릭터의 임의적인 사용은 북한측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, 이는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북한측이 그들 최고당국자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.

o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, 누가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특히 북한 국기(인공기)의 경우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으로 인해,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자체가 국민의 법감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,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## 5. 대북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(이른바 南南갈등)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, 그리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?

o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사람마다 북한에 대한 시각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

- 더욱이 우리는 동족상잔 등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대북문제에 있어 이른바 보수와 진보적인 성향 사이의 차이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.

o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그 동안 남북관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갈등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.

- 최근의 이른바 남남갈등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.

o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,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·협력 단계로 진입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

o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, 차분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는 것입니다.

o 정부는 앞으로 객관적인 대북인식의 확산 및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차이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.